

# ‘노란봉투법’ 발의... 기업 재산권 침해 vs 노동권 보호 ‘팽팽’

〈재계·국민의힘〉

〈노동계·정의당〉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발의  
與 “많은 노동자 일자리 잃어”  
민주당, 민생 입법과제로 선정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측이 노조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쟁의권을 강화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에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한정된 쟁의행위의 범위도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넓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사측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모금한 것에서 이름을 따왔다. 2015년에 법안이 발의됐으나



전해철(오른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56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은 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엔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당사자인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도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이 나와 노란봉투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아쉬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악 시도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관련해 총 6분 의문에서 법안 발의했다. 그것이 힘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의당처럼 확정해서 이 법안을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입법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상황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됐으나 노란봉투법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도 전날(14일) 국회를 찾아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민생 입법과제로 노

란봉투법을 선정하자 논평을 내고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불법 파업의 피해는 다른 협력업체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어떤 노동 쟁의로도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또한 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다.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을 보장하는 이 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새 원내대표도 尹心?... 용산 눈치보는 與

이용호 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  
3선 박대출 의원도 출마 의지 밝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내부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신경 쓰는 분위기가 있다.

이용호 의원이 15일 출마 선언하면서 합의추대론은 일단락됐지만, 당내 다수인 ‘친윤(親尹석열)’ 초선 의원 표심에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게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거론된 후보군을 중심으로 ‘윤심(尹心)’은 000에 있다’는 소문도 한 차례 돌았다.

이용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당내 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 버리고 계파와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원하면 국민의힘 ‘변화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면 국민의힘 ‘외연 확장의 상징’ 저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심(尹心)이 중요하다는데,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지금 나오는 윤심(尹心)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의원들이 윤 대통령 의중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앞서 윤 대통령과 상의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국민의 힘에 몸담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계파도, 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의원은 당내 친윤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결성 당시 공동간사를 맡은 이력이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해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와 정권교체에 일조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도 도왔다”고 강조했다.

3선 박대출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일 각에서 친윤 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비판한 뒤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지금 (출마) 방향으로 보고 있고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에 따라 친신하려 한다”고 했다.

추대론 당사자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양새가 좋게 끝나면 좋다”며 추대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윤심(尹心)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정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 당의 중대한 결정에 있어 이른바 용산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하던 당대표’라는 라는 메시지가 노출된 게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준석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또 몇 달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 이제 패턴이 노출됐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 여당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 “유엔총회 계기 한미·한일 정상회담 합의”

대통령실 “일정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유엔총회 참석 중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5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양자회담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외에 핵심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정상 간 어떤 이야기나 의제를 나눌지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 않

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는) 서로 알고 있는 우려 사항이 있고, 이미 확인한 의제도 있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실무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발전시킨 이행방안들도 있다”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중요한 것은 정상 간 만나 전진할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도 서로 만나기로 흔쾌히 (합의)했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강제징용 문제나 현안 등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고, 일본과도 내밀히 의견을 주고받아서 정상들이 어떻게 대가나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BTS 병역특례... 與 ‘찬성’ vs 정부 ‘반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 입장이 엇갈렸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BTS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병역특례 혜택 제도에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만큼, BTS의 대체복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BTS 병역특례 혜택 적용과 관련 “지금 국내 42개의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BTS 같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빌보드, 아메리칸, 에이미, 그래미 어워드

에서 우승해도 (병역특례 적용을) 안해주는 거 하고 형평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